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택

2012.10.12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bkkim21kr@naver.com)

지금은 ‘행동하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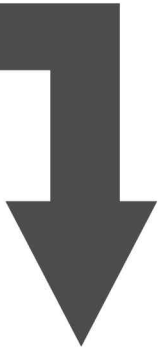
“19대 국회가 시작된 후 4개 월 남짓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입법 발의로 나온 것이 100여개가 넘는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 입법 발의만 20개가 넘는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다. 대선 후보들은 당선 전이라도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올해 회기 안에 반드시 시급한 경제 민주화를 입법하라.”

위 인용문은 경제민주화 국민운동 본부가 10월 10일 진보 정의당 의원들을 만나고 11일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집중적으로 요청한 내용이다. 물론 정책적으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민주화 정책에서 더 채워야 할 여지들이 여전히 많다. 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학문 이론적으로 지금도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개념이나 내용, 방향을 두고 많은 논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모두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미 내용이 확정적이고 여야와 다수 여론도 이견이 없이 분명한 사안도 적지 않다. 심지어 여야가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 발의한 내용들도 있다. 이런 경우 정기 국회가 열려 있는 마당에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이런 법안들 중에는 시급한 민생관련 경제 민주화 법안들도 상당하다. 중소기업 보호 입법, 비정규직 관련 입법, 청년 일자리 관련 입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입법이 미뤄지면 질수록 상인들과 비정규직,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과 생존의 위험이 늘어난다. 경제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아래 표와 같은 7대 경제 민주화 법안을 당장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19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할 7대 경제 민주화 법안	
1)	재벌 총수 범죄 등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2)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 발전 개정 실천
3)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4)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입법 5)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공감대가 가장 큰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입법화 6)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남발 규제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지키기 법안 7) 청년 실업 사태와 초저임금 문제 해결로 청년의 희망 만들기 법안
--	--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 자료집

그렇다. 여야 후보들과 정당들이 서로 경제 민주화 ‘진짜, 가짜’ 논쟁을 말로 해봐야 판별이 되지 않는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 민주화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듯이 경제 민주화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 혼란스러운 것은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잔치만 난무할 뿐 실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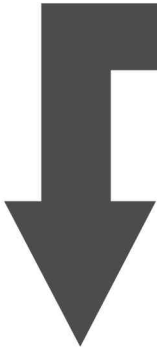
문재인, ‘세 후보의 경제 민주화 책임자 회동’을 제안을 살려라.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측 경제민주화 책임자 3자가 모여 협의하자."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경제 민주화 입법 행동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다. 이미 여야가 경제민주화와 관련 공통된 법안을 다수 내놓은 만큼 김종인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정우 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 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캠프의 경제 민주화 책임자가 서로 만나 여야 합의로 입법화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세 후보 측 책임자가 모두 모여 협의하자고 했다. 상당히 현실적인 제안이다.

이어 문재인 캠프의 경제민주화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 진영에서 경제민주화를 책임지는 김종인-장하성-이정우가 만나 입법할 건 입법하는 등의 작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이정우 위원장은 '재벌 총수들의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과 처벌 강화'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금산분리' 등에서 3자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오마이 뉴스 2012.10.11일자)

일단 문재인 캠프가 제안한 ‘경제 민주화 책임자 3자 회동’은 박근혜 캠프 등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여야 합의로 경제 민주화 법안을 무난



히, 그리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캠프도 일회적인 제안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실제 회동을 성사시키고 합의할 입법 발의 안들을 선별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안철수, ‘삼성 동물원, 엘지 동물원’을 질타하던 정신으로 돌아가자.

안철수 후보는 추석이 지난 이후 지난 10월 7일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그는 비전 선언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하여,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라고 경제개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안철수 캠프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수준으로 준비된 것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구체화된 핵심 정책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안철수 생각』보다도 더 추상화된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미 차별적으로 제시했던 ‘기업집단법’ 등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핵심 공약을 구체화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출마선언 이후 제안하고 있는 ‘혁신경제’의 내용이 기존 주장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실 새사연은 지난 2011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재벌개혁 논의가 막 시작될 때, 안철수 원장이 이른바 ‘삼성 동물원, 엘지 동물원’ 문제제기를 던졌던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왜냐하면 안철수 원장이 2030세대로부터 크게 공감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벌독식의 산업 생태계를 깨고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다. ‘삼성 동물원, 엘지 동물원’이라는 개념에는 이 모든 것이 매우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그 어떤 개념보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잘 드러내 주었다.

“더욱이 대다수 청년들이 취업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에 재벌 대기업의 이익독식이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자각이 생기면 재벌대기업은 좌절의 대상에서 다시 ‘분노의 대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현재 이는 반대급부로 비 재벌 출신 자수성가형 안철수 원장에 대한 동경으로 나타난다. 재벌에 대해 ‘동물원식 생태계’라면서 비판하고, ‘중소기업이라는 동물을 가두어 죽이는 동물원’이 바로 재벌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기업 생태계 강조했던 안철수 원장의 상징성은 재벌 비판적이라는 데 있다.”(새사연, 『리셋 코리아』, 224쪽)

우리는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 캠프가 ‘삼성 동물원, 엘지 동물원’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결기를 세울 것을 다시 기대한다. 그를 바탕으로 『안철수 생각』에 이미 밝힌 재벌총수에 대한 엄격한 범적용이나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 보호, 최저임금 상향 관련 입법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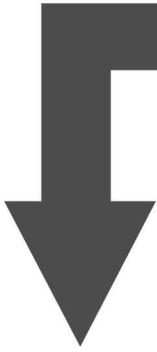
박근혜, 권위주의로는 경제 민주화를 못한다.

캠프 인선으로 내홍을 겪던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를 책임진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1일, “박근혜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적어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두 가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왜 두 가지 밖에 안 되는지는 차치하고,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아니라 캠프가 직접 새로 입법안을 만들 모양이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이 발표한 내용 등을 고려해 직접 법안을 준비할 생각”이라는 보도가 그것이다. (경향신문 2012.10.11일자)

도대체 무슨 맥락일까? 박근혜 캠프 김종인 위원장은 마치 자신만이 경제 민주화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직 공약도 제대로 풀어놓지 않으면서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이미 발의된 100여개의 법안도 모조리 무시하고 본인이 시범적으로 두어 개를 만들어서 입법화하겠다고 한다. 오만을 넘어서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지금 경제 민주화는 학문적인 고찰이나 경륜이 부족해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삶의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불평등으로 얼룩져 있고, 99%의 생활이 위기에 처했는지를 정치권이 제대로 공감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박근혜 표 경제 민주화의 결정적 약점이 여기에 있다.

박정희 독재정권 그늘에서 성장한 후보 자신이나 참모들이 대부분 민주주의적 소양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 삶의 현장을 살피고 국민에게 힘을 주어 재벌을 견제하도록 하는 경제 민주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적으로 재벌들을 일부 겁주는 식의 ‘권위주의적 재벌개혁’, ‘민주주의 없는 경제 민주화’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경제 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도 무시하고,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입법안이나 문재인 캠프 등의 제안도 무시하고, 심지어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입법안을 그저 ‘참고’만 해서, 아예 캠프차원에서 다시 일부러 입법안 두 개 정도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독재자가 국민에게 선심을 쓰고 시혜를 베풀 듯이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동하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쇼 맨십하는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갈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 민주화를 맡기기가 힘들어 보인다.



새사연의 6년 연구결과를 모두 모은 새 책!

리셋코리아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이 출간 되었습니다.

